

제15권 20호

2025. 10. 20 ~ 2025. 11. 2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논단

치매 인구의 확대와 금융의 역할

이슈분석

중국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명암(明暗)

금융경영브리프

Citi 등 주요은행,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결제 서비스 제공
MUFG 20년 성장과 재도약의 길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부동산 정책과 공조 차원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
외 환 : 협상을 앞둔 힘겨루기
부 동 산 : 정부, 수도권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발표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혜미(hmikim)
연구원	유승원(youth1)

논단

연구위원	정승희(smiley77)
------	---------------

이슈분석

연구위원	강미정(ashleykang)
------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방승연(sybang)
연구원	김종현(jh.kim)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외 환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부동산 연구위원	황규완(gwhwang)

금융지표

연구원	서유나(yuna.seo)
-----	---------------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제15권 20호

2025. 10. 20 ~ 2025. 11. 2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 01 | 논단 | 치매 인구의 확대와 금융의 역할 |
| 04 | 이슈분석 | 중국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명암(明暗) |
| 08 | 금융경영브리프 | Citi 등 주요은행,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결제 서비스 제공
MUFG 20년 성장과 재도약의 길 |
| 12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부동산 정책과 공조 차원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
외 환 : 협상을 앞둔 힘겨루기
부 동 산 : 정부, 수도권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발표 |
| 18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치매 인구의 확대와 금융의 역할*

정 승 희 연구위원

치매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치매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금융사기, 치매머니 확대 등의 각종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부문의 발전이 미흡한 상황으로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치매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향후 치매 시대 도래에 대응하여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신탁, 보험 부문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치매인구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

지난 2000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를 지나 당초 예상보다 이른 2024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101만 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치매 발병 추세가 지속되면서 2050년에는 226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매 전단계인 경도 인지장애¹¹로 진단받은 고령자를 포함할 경우 치매 인구는 2050년 569만 명까지 증가하는 등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인구의 확대는 단순히 환자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치매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간병 및 요양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확대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서 금융사기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치매환자의 가족 차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노인 돌봄이 가족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경제활동의 제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치매 환자의 자산동결 문제, 즉 치매머니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인 치매머니는 GDP의

국내 치매인구의 빠른 증가와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

치매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금융사기, 치매머니 확대 문제 등이 우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이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치매 전 단계

6.4%인 154조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치매머니의 확대는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붕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아직까지 국내 치매 금융시장의 발전은 미흡

금융은 치매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금융은 치매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치매·발병 전 건강관리 및 예방 단계부터 발병 후 중증 치매 단계까지 발생하는 의료비 및 간병비를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치매환자 가족의 경우 간병에 따른 퇴직·휴직 등 경제적 손실에 대비한 소득보상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치매 고령층의 자산 동결 문제는 신탁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다. 치매신탁은 대표적인 치매 금융상품으로 치매 발병 후 원활한 자산관리와 동시에 자산보호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치매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가 관리 가능한 신용카드나 비정상 거래 등 금융사기 등의 징조를 탐지하여 지정보호자에게 알림해주는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다.

아직까지 국내 치매·간병 보험 시장 및 신탁 시장의 발전은 미미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치매 금융시장의 발전은 더딘 편이다. 최근 치매·간병 보험 상품의 판매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관련 시장의 규모는 2024년 수입보험료 기준 약 3.2조원으로 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1.3%에 불과하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치매·간병보험을 가입한 비율은 17.5%로 향후 대다수의 고령자가 치매 발병 시 치료비 마련이나 돌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신탁 시장의 경우에도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성화가 더딘 편이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의 잔액은 3.9조원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이 약 4천 3백조 원이며 치매 머니 규모가 150조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협소한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치매 케어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발전

한편 고령화의 진전이 빠른 해외 주요국에서는 금융회사를 통한 치매케어가 우리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가형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간병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대형 보험사들은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보험 상품과 요양 서비스를 직접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매머니의 문제에 대응하여 민사신탁 컨설팅이 활성화되어 있고 치매 전용 주식관리계좌 및 랩 특약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자녀 등 가족과 연계를 통해 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소비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특화 선불카드 등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 역시 장기요양보험과 퇴직연금을 연계해 노후 의료비 충격을 완화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 치매 인구 확대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 확대 필요

금융이 치매 인구 확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치매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지난 2008년 1차 치매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다방면에 걸쳐 치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치매와 관련하여 주로 신탁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치매환자의 자산관리를 위해 공공신탁²⁾을 도입하는 한편 민간신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다. 향후 공공 신탁과 더불어 민간신탁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대상 원금보장형 신탁상품 허용, 일부 합동 운용 허용,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금지 규제 완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보험사의 치매관련 역할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제도 개선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제 요인으로 인해 일본 등 해외에 비해 요양사업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치매에 따른 요양 수요를 근본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 소유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시점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금융회사도 치매케어가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니어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세분화하여 치매와 관련된 고객 니즈에 맞게 특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담 조직을 구축하는 등 치매인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한다면 치매 인구 확대에 따른 위기를 사회적 신뢰와 산업적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치매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방면의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

금융회사도
치매케어가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

[2] 공공기관이 자산을 관리 및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인지 능력이 저하될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생활비 지급, 병원/요양비 결제, 장례 및 상속 절차를 종합적으로 이행

중국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명암(明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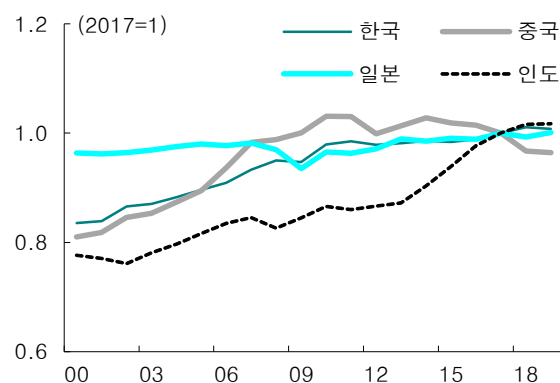
강 미 정 연구위원

중국은 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 필요성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첨단산업 편중 정책은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으로 가계 소득 불확실성 우려를 확대시켰다.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핵심기술 자립화 노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 노력 속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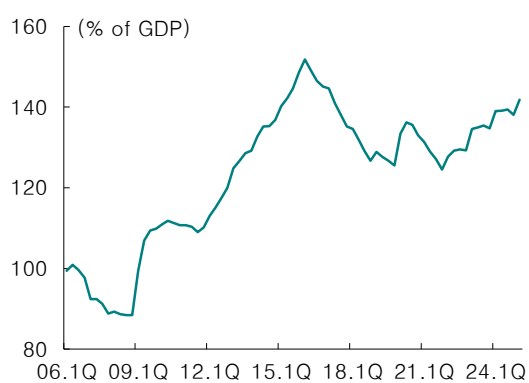
-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주도한 무리한 양적 성장 전략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표출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이 불가피
 - 정부 주도의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투자 등은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에 기여했으나, 성장 동력 효율성 저하와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과잉부채를 야기
- 정부는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자원 집약형 제조대국에서 기술 주도형 스마트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추진
 - '15년에 발표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는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향후 성장 동력이 될 10대 산업을 선정^[1]
 - 전략 추진을 위해 약 440여개의 세부 정책이 마련('15년~'18년)되었으며, 하드웨어 및 첨단 제조 부문 육성과 함께 AI도 핵심 산업에 포함

■ 주요국의 총요소 생산성 추이



자료 : Penn World Data 10.01

■ 중국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 추이



자료 : BIS

[1] 10대 핵심 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선진궤도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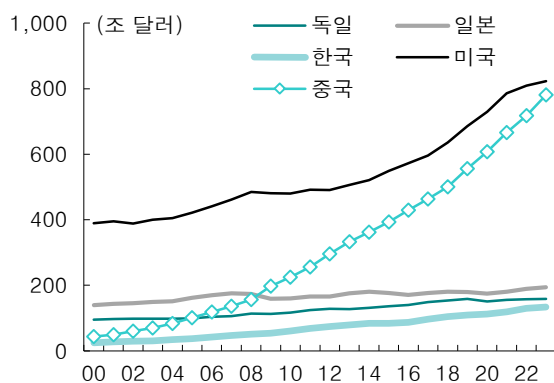
■ 기술 추격 역제를 위한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

- 중국의 강력한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3대 신동력^[2]인 EV와 배터리, 태양광 등은 ‘중국제조 2025’에서 설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글로벌 선두를 차지
 -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국가 기금을 통한 직접 투자 및 보조금,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맞춤형 신용 공급도 확대
 - 美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에서 주요 5대 핵심·신흥기술을 중심으로 25개국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3]
-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의 경우 '25년 판매량 목표인 300만대를 '21년에 조기 달성한데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60% 이상으로 독보적인 위치 유지
 - 중국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기업들의 성장을 중심으로 CATL와 BYD 등 대표적인 이차전지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M/S는 각각 38%, 16%(출하량 기준)
- 태양광 패널 부문에서도 글로벌 상위 5개가 모두 중국 기업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풍력 터빈 시장에서도 상위 중국 기업 점유율이 44% 수준

■ 반면 기업 간 출혈 경쟁에 따른 수익성 훼손 및 디플레이션 위험 등의 부작용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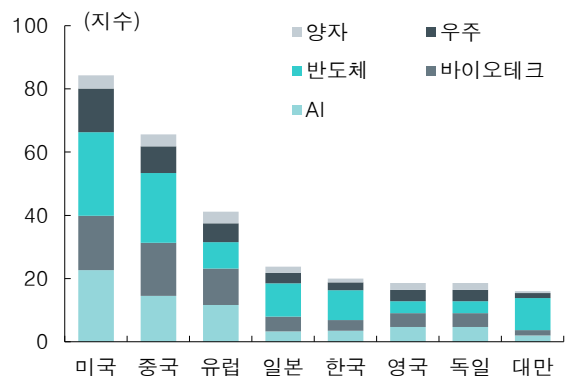
- 정부의 첨단 산업으로의 정책 자원 집중은 과거와 달리 신흥산업에서의 공급과잉을 유발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 간의 소모적인 경쟁(involution)^[4]이 심화
 - 과거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는 부동산 및 인프라 중심의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구조 하에서 철강, 구리, 알루미늄 등의 중공업에서 발생
 - 최근에는 주요 신흥산업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태양광 패널의 경우 상장사 121개 중 39개가 적자를 기록하였고, 5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파산을 신청

■ 주요국의 R&D 지출 추이



자료 : OECD, Bloomberg

■ 주요국의 핵심·신흥기술지수



자료 : 하버드케네디스쿨

[2]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설비 등 친환경 ‘3대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설정

[3]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dex Report”, 202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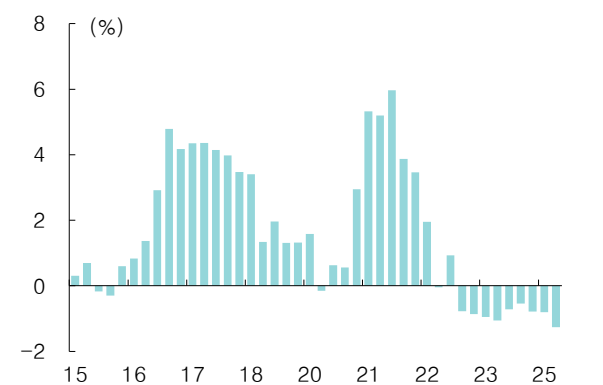
[4] 내권화(內捲化, involution)는 내부 경쟁은 치열하지만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는 상태를 지칭

- 부동산 침체 장기화 속 대내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공급과잉은 가격하락 기대로 물가 회복을 지연시키고, 저물가 상황을 악화
 - 전기차 및 철강 등의 경우 수급 불균형에 따른 재고 누적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산자물가의 하락세도 심화
- 정책 당국은 비효율적인 경쟁 억제를 위해 전기차 및 태양광, 철강 등 공급 과잉이 심각한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
 - 철강 및 시멘트 등 전통 산업의 경우 감산 및 생산능력 축소 등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흥산업은 신규 투자 조정 등을 통해 공급 압력을 완화

■ 더욱이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는 가계 소득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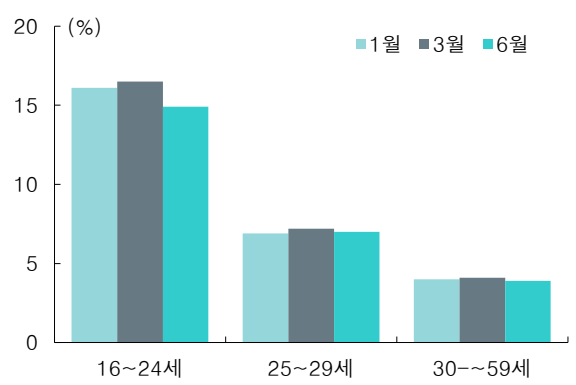
- 중국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및 로봇, 항공 등의 전략 산업은 공공투자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편으로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산업용 로봇시장 성장은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공의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⁵⁾
 - 반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공존하는데 업무 자동화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중간층 숙련자와는 달리 고숙련 인력은 임금과 수요 증가 전망
- 특히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전통 제조업 부문에서의 인력 감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의 제한적인 고용은 청년층의 취업난을 가중
 - '23년 부동산 개발 및 건설 인력이 '20년 대비 27%나 감소하였으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유은행도 수익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을 감축
- 고용 위축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는 소비지출 여력을 제한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킴으로서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악순환 초래

■ 중국의 GDP 디플레이터



자료 : CEIC

■ 중국 연령대별 실업률



자료 : CEIC

[5] 중국 제조업 종사 농민공은 약 3억 명이며, 농민공의 중학교 졸업률은 52%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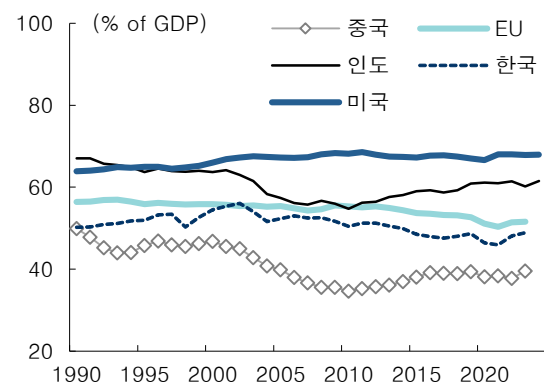
■ 부정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생존전략”인 첨단기술 자립 정책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25%)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제조업을 국가 안보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인식
- 동시에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 고착화 속 공급망 압박이 가중되면서 핵심 기술 자립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변모
 - 핵심기술 자립은 외부 의존도 축소를 통해 내수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경제 발전에 기여
- 특히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전망
 -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율 목표치는 2025년 70%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27% 수준
 - 15차 5개년 경제기획(‘26~’30년) 기간 중 반도체와 로봇, 자율 주행, AI 등 첨단 제조 부문에 대한 정부의 인적 자원 및 자본 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舊경제에서 新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경기하방 압력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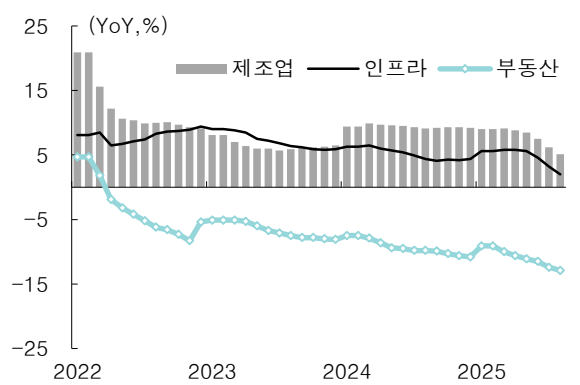
- 新경제인 첨단기술 산업의 경우 정부의 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내수 진작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舊경제인 부동산 부문 부진도 지속
 -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부의 효과는 제한적
- 투자 위주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시 단기적으로 투자 위축으로 인해 고용이 약화되고, 소비 회복이 지연될 우려
 - 생산 및 투자의 경우 정부의 과잉생산 규제 및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에 따른 가계심리 위축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불가피 

■ 국가별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중



자료 : World Bank

■ 중국 고정자산투자 항목별 추이



자료 : CEIC

Citi 등 주요은행,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결제 서비스 제공

방 승 연 수석연구원

씨티은행은 청산 솔루션과 블록체인 플랫폼 ‘Citi Token Services’를 통합하여 연중무휴 실시간 국경 간 결제와 유동성 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는 폐쇄형 블록체인을 통해 예금을 토큰화하고, 기존 인프라와 결합함으로써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한 사례이다. JP Morgan과 HSBC 등 글로벌 주요은행들도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실시간 결제와 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법제화 지연으로 제도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확산을 위한 신속한 법제화와 금융권의 투자가 요구된다.

■ 씨티은행,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국경 간 결제 서비스 출시^[1]

- 씨티은행은 24/7 청산 솔루션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결제 플랫폼 ‘Citi Token Services’를 통합 출시하여 실시간 국경 간 결제 및 유동성 관리 서비스를 제공
 - 폐쇄형 블록체인^[2] 기반으로 구축된 ‘Citi Token Services’는 기존 은행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하여 예금을 토큰으로 변환해 국경 간 결제가 가능
- 씨티은행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자금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은 사전 유동성 확보 필요성이 감소하고 시간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효율성 및 경쟁력이 제고

■ 전통 결제 시스템은 시간 제약, 속도·비용 부담 등이 한계로 지적^[3]

-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은 영업시간, 주말 및 공휴일 등의 제약으로 국경 간 자금 이동이 지연되어, 기업의 유동성 관리와 글로벌 거래 효율성을 저해
- 중개은행을 경유하는 복잡한 절차와 환전·송금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거래비용 발생 및 결제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비용 예측도 한계
 - G20은 국경 간 결제의 평균 수수료를 1%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200달러 송금의 평균 수수료는 약 6.3%
- 다국적 기업들의 24/7 결제 요구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은행들은 ‘상시가동 정보 시스템(always-on information systems)’과 ‘실시간 유동성 솔루션(real-time liquidity solutions)’에 투자를 적극 확대 중

[1] “Integrating Citi Token Services with 24/7 USD Clearing for Real-Time Cross-Border Payments and Liquidity Management”, Citi, 2025.9

[2] 사전에 허가된 참여자만이 거래를 검증·승인할 수 있는 제한된 네트워크로,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보장

[3] “Real-Time, Real Value: Delivering on the Promise of Cross-Border Payments”, Citi, 2025.9

■ 글로벌 은행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결제 플랫폼 구축으로 실시간 결제를 지원

- JP Morgan은 예금을 토큰자산으로 변환하여 실시간 결제와 유동성 관리 지원을 위해 폐쇄형 블록체인 기반 Kinexys와 개방형 블록체인 기반 JPMD를 운영
 - JP Morgan이 운영하는 Kinexys(舊 JPM Coin)는 폐쇄형 블록체인으로 작동하며, 은행 내부망에서 기업 고객의 자금 운용 및 유동성 관리에 활용
 - 개방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범 운영 중인 JPMD는 사용자가 직접 거래 상대방에게 토큰을 전송할 수 있어, Kinexys와 달리 은행 외부로 결제 확장이 가능
- HSBC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예금서비스(TDS)를 출시하고, 기업 고객의 달러 등 법정화폐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 및 저장하고 실시간 결제를 지원
 - '25.9월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 'Ant International'은 HSBC의 TDS를 활용하여 홍콩과 싱가포르 지점 간에 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국경 간 거래 완료

■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결제 플랫폼 확산에 주목하여, 국내에서도 산업 성장을 위한 신속한 법제화와 금융사의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

-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며,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결제 인프라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명확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
 - 2023년 금융당국의 STO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블록체인의 입법화와 시장 조성을 기대하였으나,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관련 법제화가 정체된 상태
- 국내 금융사는 해외송금 등 국경 간 자금 흐름의 비효율 개선을 위해 토큰화를 통한 자금 유동성 관리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국경 간 거래 결제방식별 비교

	Citi Token Services	카드	자동 청산소 (ACH)	전신송금
속도	즉시	승인 즉시 (정산은 1~3일 소요)	1~3일	1~2일
비용	저비용 (gas fee)	1~3% (가맹점 수수료)	저비용	고비용 (건당 \$1~50)
신뢰성	높음	매우높음	높음	매우높음 (은행 인프라 의존)
편의성	전세계 24시간 가능	보편적 (Ubiquitous)	일반적 (Common)	대규모 거래에 적합, 빈번한 사용에는 불편

자료 : BVNK

■ Citi Token Services 작동 방식



자료 : Citi

MUFG 20년 성장과 재도약의 길^[1]

김 종 현 연구원

최근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MUFG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도 비은행 비즈니스 다각화와 아-태 지역 중심의 해외영업 확대를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였다. MUFG는 일본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사업 확대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성장전략으로 아-태 지역 사업 강화, 디지털 역량 확보, DX·ESG·IB 전문 인력 영입 등을 선정하였다. 국내 금융그룹은 수익구조가 국내에 편중되어 있어 일본 대형 금융사 전략을 참고하여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 지난 20년간 MUFG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

- '25년 10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MUFG는 여러 자회사 인수 및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비용 효율화와 영업기반·고객기반 확대를 추진
 - MUFG는 자전주의(自轉主義) 경영 철학 하에 그룹 내 핵심기능을 강화하여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효율성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
- MUFG는 수수료 수익 확대 등 수익구조 다변화와 아-태 지역 및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영업을 확대함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룸
 - 지난 20년간 MUFG의 자산 성장은 연평균 4.3%, 영업이익 증가율은 연평균 1.5% 달성

■ 비은행 금융 확장 등 사업구조 다각화와 CIB 중심의 해외진출을 통해 성장 기반 마련

- **(사업구조 다각화)** 일본의 장기 저금리에 따라 예대 마진이 축소되자 WM, IB 등으로 비즈니스를 다각화하여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는 등 비이자 수익 비중을 확대
 - 그룹 출범 초기에는 은행 중심의 사업구조였으나 비은행 부문 강화로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한 결과 MUFG의 비이자 수익 비중은 '01년 33.8%에서 '24년 43.4%로 확대
 - 신탁업무와 금융상품 판매 등 리테일 부분의 수수료 수익뿐 아니라 기업고객의 자금운용, M&A자문 등 각종 협약을 통해 기업금융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확보
- **(CIB 중심 해외진출)** 장기 경기침체를 지속하는 일본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CIB를 중심으로 하여 해외영업을 확대하고, 디지털화를 위한 글로벌 제휴를 확대
 - 해외시장은 일본에 비해 금리수준이 높아 운용수익률 확보가 용이하고 금융기회가 다양
 - '08년 모건스탠리 지분 투자를 통해 미국 CIB 사업 기반을 다졌으며, 태국·인니 등의 현지 은행 인수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신디케이트론, PF시장에도 진출

[1] “MUFG20年、変貌するトップバンク”, Nikkei, 202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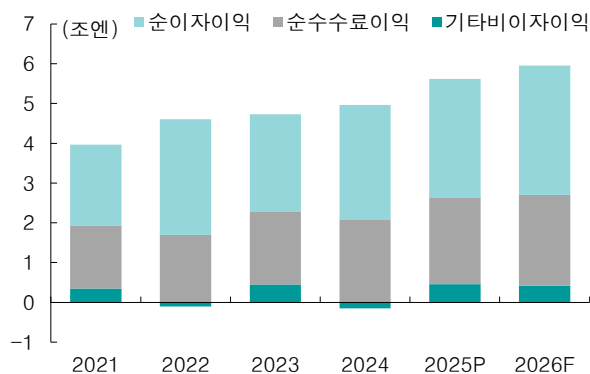
■ MUFG의 향후 중기 성장전략은 아태 지역 사업 강화, 디지털 역량 확보, 인재 영입 등

- **(아태 지역 사업 강화)** 현지은행 인수 및 투자를 통해 진출 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 금융과 PF 등 CIB 영업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추진
 -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태국의 은행 Krungsri 등을 거점삼아 리테일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아-태 CIB 사업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의 IB 허브의 기능 확대를 추진
- **(디지털 बैं킹 강화)** 국내외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스타트업의 지분 투자와 인수, 제휴 등을 적극 추진하며 디지털 역량을 강화
 - 동남아 1위 차량공유업체인 Grab('20)에 출자하고, 인니 BNPL사 Akulaku('22)와 필리핀 모바일 결제사 Globe Fintech Innovations('24) 등에 투자
- **(인재 영입)** 기존에는 장기고용과 순환보직을 통해 내부적으로 범용형 인재(Generalist)를 양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종신고용 체계에서 벗어나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
 - 또한, DX, ESG, 글로벌 IB 강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적극 영입

■ 국내 금융사는 MUFG 등 日 대형 금융사의 전략을 참고하여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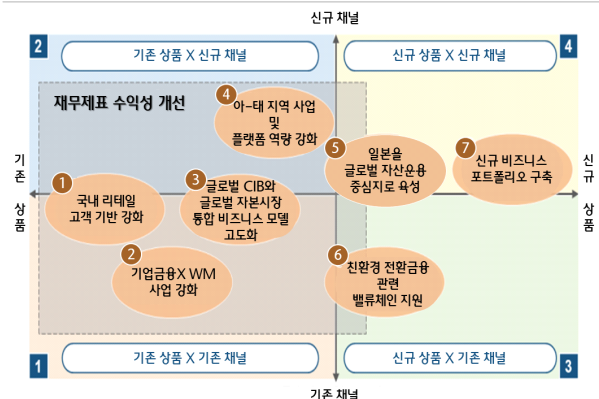
- 국내 금융사는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MUFG 등 일본 금융사의 사례를 참고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
 -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영업이익 중 해외 비중은 11%에 그치고 있는 반면, MUFG(57%), SMBC(58%) 등 日 대형 금융그룹의 해외 영업이익 비중은 60% 내외에 달함
 - 은행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여 비이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CIB, WM 비즈니스 강화 등의 비은행 금융 사업 다각화와 동남아 현지 금융사 인수 등 해외진출 전략을 참고
- 아울러 해외진출 확대 및 사업구조 다각화 등 금융그룹의 주요 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적화된 인재 양성·관리 전략도 수반될 필요 

■ MUFG 수익 구조



자료 : MUFG Financial Information, Bloomberg

■ MUFG의 중기 성장 전략



자료 : MUFG Strategy

금리: 부동산 정책과 공조 차원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

민 현 하 연구원

美 금리는 연방 정부 섣다운, 美·中 관세 갈등, 파월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하락했다. 韓 금리는 주택가격 상승, 고환율 등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WGBI 편입 재확인, 美 금리 하락에 연동하며 제한적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향후 韓 시장금리는 10.15 부동산대책 효과 확인, 대미 관세 협상 지연 등으로 10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예상되면서 당분간 하락 압력은 축소될 전망이다.

■ 美 금리는 연방 정부 섣다운, 美·中 관세 갈등, 파월의 비둘기적 발언 등으로 하락

- 美 금리는 정부 섣다운으로 인한 연방 인력 해고, 美·中 관세 갈등(中 희토류 수출 통제, 美 추가 관세 100%)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하락
 - 美 2/10년물 금리(%) : 9월말 3.61/4.15 → 10.16일 기준 3.43/3.98
- 또한, 섣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된 상황에서 파월은 실업률 상승을 우려하며 고용 둔화가 美 경제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언급해 추가 금리 인하 기대 상승
 - 파월은 발표가 지연된 고용보고서를 대신해 낮은 채용과 해고 수준, 구직/채용시장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고용 둔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 日은 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 당선 이후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발행 물량 부담이 확대되어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 상승
 - 日 10/20년물 금리(%) : 9월 말 1.65/2.61 → (4일 당선 이후) 10.6일 1.68/2.70

■ 韓 금리는 금융안정 이슈에도 美 금리 하락, WGBI 편입 재확인으로 2.5%대에서 등락

- 韓 금리는 일부 지역 주택시장 과열로 금리 인하 시기 지연 및 폭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며 상승압력을 받았지만 美 금리 하락에 연동해 소폭 반락
- 또한, WGBI 편입과 관련해 FTSE 러셀이 일정을 재확인했고(‘ 26.4월) 편입 비중 확대(2.05%→2.08%)하며 ‘ 26년도 국채시장의 수급 불안 요인이 완화
- 다만, 8월 이후 美 금리 하락세,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 등으로 외국인 선물 매도세로 전환되는 상황으로 시장금리 하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외국인 국채3년 선물 순매수(계약) : 8월 +45,421 → 9월 -68,619 → 10.16일 기준 -7,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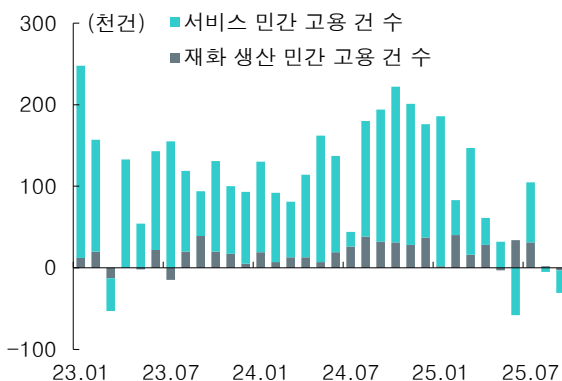
■ 10월 금통위, 주택가격 상승세를 경계하며 정부 정책과의 공조 차원에서 동결 전망

- 한은은 對美 관세 효과 확대에 의한 수출 둔화, 내수 회복 지연 등 경기 하방 요인에도 주택가격 급등, 고환율 등 금융안정 이슈로 10월 금통위 동결 전망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의지를 표명한 만큼 한은은 정책 효과 확인한 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나갈 전망
 - 특히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정부 정책 효과에 따라 인하 시점 지연 가능성도 대두되는 상황
-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식시장 내 자금유입이 확대되며 자산 가격이 상승해 과도한 유동성 풀림 현상에 경계하며 통화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

■ 韓 시장금리는 10월 금통위 동결 전망에도 美 금리 하락, 수급여건 완화로 소폭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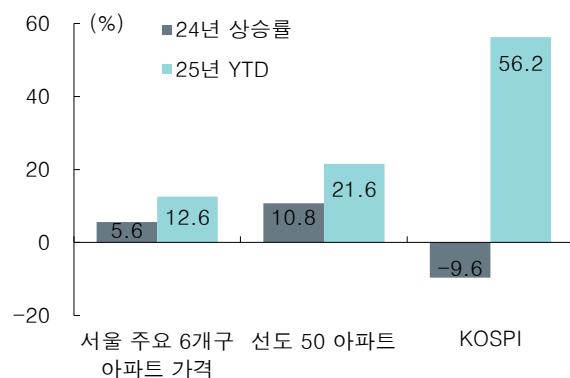
- 美 금리는 연방 정부 섯다운, 美·中 무역 갈등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와 고용시장 둔화로 10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고 시장금리도 하락 전망
- 韓 금리는 10월 금통위 동결 전망이 우세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 효과를 확인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으로 美 금리 하락에도 제한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또한, APEC(31일) 전후 韓·美 관세 협상이 선물 시장 내 외국인 포지션을 좌우할 전망
- 국채 발행 확대, 美 중소 지역은행 부실 증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생산적 금융 관련 중기대출 자금수요 확대는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거래 및 가계대출 수요 축소, 증시 호황과 주식시장 유동성 유입 확대에 따른 은행권 예금 증가세 둔화가 은행채 발행 확대를 견인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2.40%~2.65%, 2.80%~3.05% 범위로 전망 

■ ADP 민간 고용 지표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연구소

■ 주택 및 주식시장 자산가격 상승률



주1 : 서울 6개구(강남,송파,서초,용산,성동,마포)아파트 가격 상승률 단순 평균

주2 : 부동산 가격은 9월 기준, 주식시장은 10.16일 기준

자료 : KB부동산, 인포맥스, 하나금융연구소

외환: 협상을 앞둔 힘겨루기

김 영 준 연구위원

원/달러 환율은 무역 전쟁 재점화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로 1,430원대까지 급등한 이후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에 반락했다. 달러화는 프랑스 및 일본 정국 불안과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트럼프의 대중 100% 관세 부과로 미·중간 긴장이 재고조되었다. 11월 10일 관세유예 종료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투자펀드 관련 협상 타결 기대감과 코스피 강세에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무역전쟁 재점화로 1,430원대 진입한 이후 코스피 강세로 반락

- 원/달러 환율은 투자펀드 관련 한·미 이견 노출로 1,400원을 상향 돌파한 이후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와 프랑스 및 일본 정국 불안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1,430원대까지 추가 상승
 -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제재를 가하면서 원화 약세 심화
- 이후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에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증시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1,410원대 후반까지 하락
 - AI 투자 훈풍으로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연일 신고점 경신

■ [국제 환율] 달러화는 연방정부 섣다운 장기화에도 강세 기록

- 美 달러화는 연방정부 섣다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호조와 주식시장 강세, 프랑스 및 일본 정국 불안 등에 힘입어 100P에 근접하는 강세
 -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도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
- 유로화는 프랑스 총리 사임 등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약세를 기록한 이후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유예를 제시하자 정국불안 완화 기대감에 낙폭 만회
 - 영국 정부가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 등 재정 건전성 확보 의지를 드러내면서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유로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 日 엔화는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면서 통화완화·재정확대 등 ‘아베노믹스’ 정책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에 약세
 - 다만,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에서 이탈을 선언하면서 사나에 자민당 총재의 총리 취임 가능성에 균열이 생기면서 엔화 약세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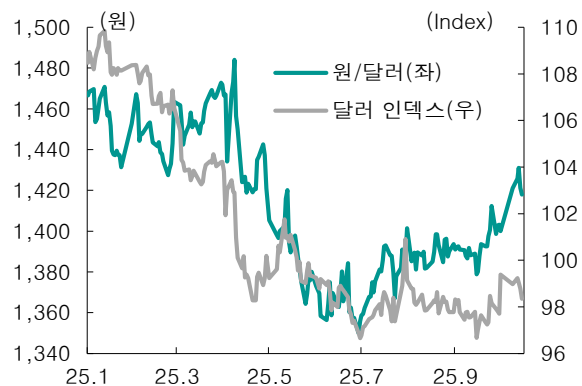
■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트럼프의 대중 100% 관세 부과로 긴장 재고조

- 트럼프 美 대통령이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비판하며 11월 1일부터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 앞서 중국은 수출 통제 대상 희토류 범위를 확대하고 가공기술 관리를 강화
- 이후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할 수 있다”며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양국이 상대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트럼프가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 검토를 발표하는 등 무역 갈등이 강화되는 양상
- 이달 말 APEC 정상회담에서 ‘빅딜’을 통해 관세 전쟁의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희토류를 둘러싼 갑작스러운 공방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
 - 회담 이전에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 우세

■ 원/달러 환율, 투자펀드 협상 타결 기대감과 코스피 강세에 하락세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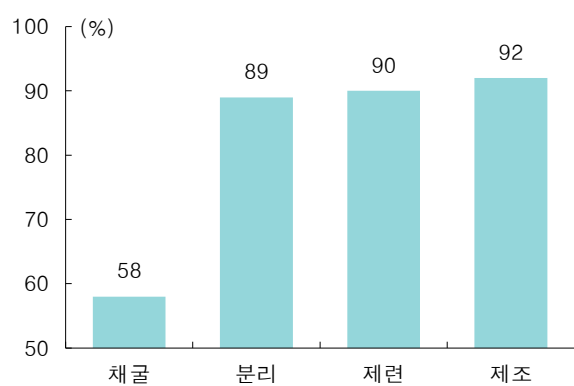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투자펀드 관련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
 - 베네통 재무부 장관이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확대
-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은 외국인 주식 매수세 지속과 반도체 수출호조로 인한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 등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반면 거주자 해외주식투자 및 수입업체 결제 등 달러 실수요는 환율 하단을 지지
- 원/달러 환율은 1,390~1,430원에서 주거래를 형성할 전망 

■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 Bloomberg

■ 세계 희토류 시장 중국 점유율



자료 : DOE(2022)

부동산: 정부, 수도권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발표

황 규 완 연구위원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불안이 재현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지정 및 금융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수요관리 대책은 금융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규제에서 매매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기조는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계절적 성수기 등의 영향으로 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

- 가을 부동산 시장 성수기 도래 등 계절적 영향 및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감 확산으로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은 다시 확대
 - 9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1%로 8월 상승폭(0.05%) 대비 확대되었으며 수도권(0.17% → 0.23%)과 서울(0.45% → 0.58%)이 상승폭 확대를 주도
- 특히,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수도권 특정지역의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가격지수 전반을 견인하는 등 시장 내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는 중
 - 서울 동남권¹⁾(0.89%) 및 도심권(0.86%), 경기 경부1권(0.63%)은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인 반면 경기 경의권(-0.21%), 경기 서해안권(-0.10%)은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중

■ 가격 상승폭 확대에 대응하여 정부는 부동산 직접 규제를 포함한 10.15 대책을 발표

- 가격 불안이 재개됨에 따라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지정 및 금융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
- 정부의 수요관리는 유동성 통제를 통한 간접 관리에 거래 규제와 같은 직접 관리가 더해지는 등 정책의 강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
 - 6.27 대책 당시 정부는 가계부채 건전성 확립을 위해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가격 안정을 우선시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
-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이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으로 중첩 지정하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 의지를 천명

[1] 서울 동남권은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서울 도심권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경기 경부1권은 과천시, 성남시, 안양시 등 5개 시, 경기 경의권은 파주시, 고양시 등 3개 시, 경기 서해안권은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등 7개 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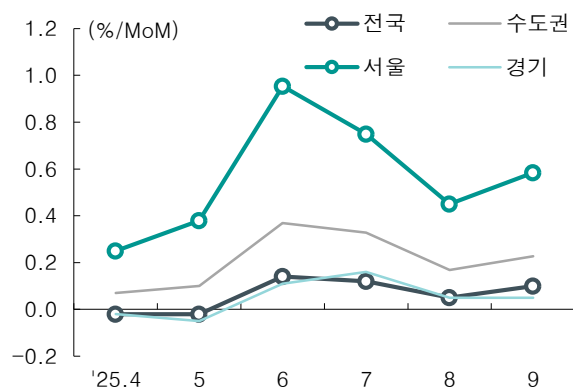
■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및 거래량 감소 등 시장 과열은 진정될 전망

- 단기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및 경기 12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중첩 지정함으로써 갭투자 등 투자수요는 향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 규제지역 구입자는 실거주 의무(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비사업 조합원 양도 제한(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 거래세 중과, 청약 및 전매제한(조정대상구역)등 부담
- 또한, 주택가격에 따른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조정, 전세대출 DSR 적용 등으로 주택시장에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유동성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
- 추가적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세부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부동산 투자심리가 억제되는 효과도 예상
 - 정부의 시간표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은 내년 중 구체화될 예정이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실행은 매우 신중할 것으로 추정

■ 안정적인 거시 경제 운영 측면에서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기조는 이어질 전망

- 한국은행은 수차례 경기 회복을 위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동시에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급증과 같은 부작용도 우려
 - 한국은행은 금리 하락과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영향력은 금리 수준이 낮을수록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금융안정보고서, '25.6월)
- 또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이전에 부동산 수요 관리 강화와 같은 거시 건전성 정책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BOK 이슈노트, '25.9월)
- 따라서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운용 및 가계부채 건전성 확보라는 거시 경제 운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

■ 10.15 대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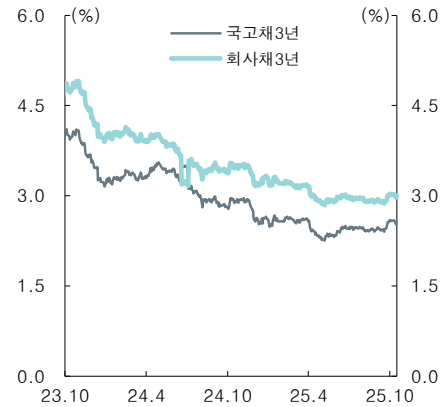
정책 구분	주요 내용
규제지역 지정 확대	서울 전역 및 경기(12곳)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구역 중첩 지정)
금융규제 강화	주택가격별 주담대 최고액 차등 (15억 초과 주택 2~4억원 감액)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스트레스 금리 1.5%p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도입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 시행
거래질서 확립	가격 담합 범부처 대응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자료 : 국토교통부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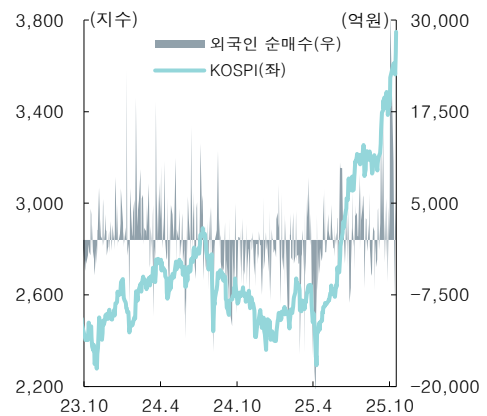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9월말	2.58	2.57	2.59	3.02	2.58	2.73
10월 10일	2.54	2.55	2.57	3.03	2.59	2.73
10월 13일	2.54	2.54	2.56	3.00	2.55	2.68
10월 14일	2.52	2.54	2.55	2.98	2.53	2.65
10월 15일	2.52	2.54	2.54	2.97	2.52	2.64
10월 16일	2.53	2.54	2.56	3.00	2.57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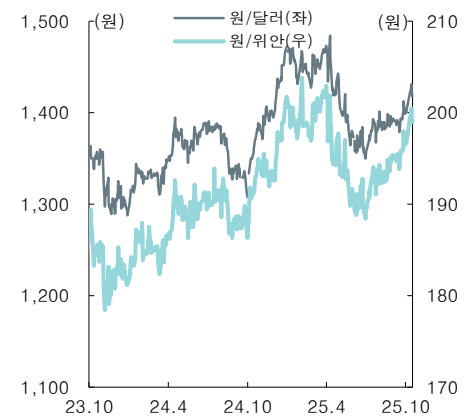
●●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9월말	3,424.6	111,574	526	260
10월 10일	3,610.6	196,008	407	10,614
10월 13일	3,584.6	142,709	408	-8,233
10월 14일	3,561.8	189,264	734	5,552
10월 15일	3,657.3	138,799	544	1,629
10월 16일	3,748.4	176,648	496	6,591



●●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24년말	1,435.5	928.0	197.0	1,487.9
9월말	1,402.9	948.5	197.1	1,646.0
10월 10일	1,421.0	939.8	199.2	1,650.6
10월 13일	1,425.8	936.2	199.9	1,649.2
10월 14일	1,431.0	942.4	200.5	1,660.8
10월 15일	1,421.3	940.8	199.4	1,655.3
10월 16일	1,417.9	942.4	199.0	1,6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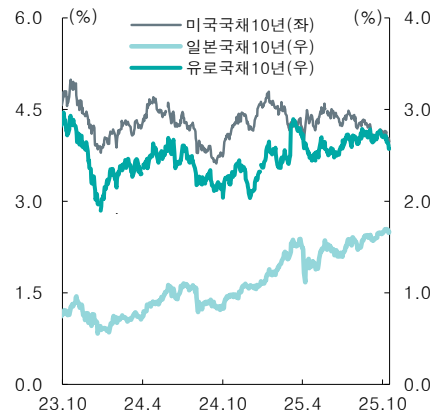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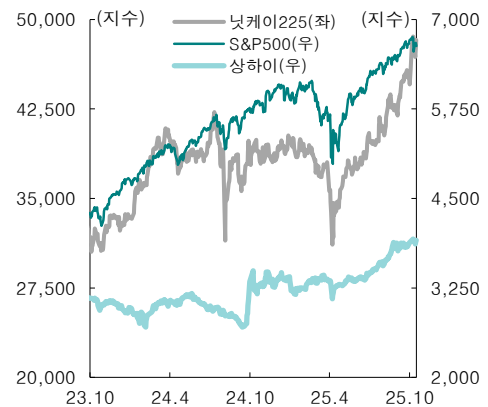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24년말	4.33	4.31	4.24	4.57	1.10	2.37
9월말	4.09	4.35	3.61	4.15	1.65	2.71
10월 10일	4.10	4.33	3.50	4.03	1.69	2.64
10월 13일	-	-	3.50	4.03	1.69	2.64
10월 14일	4.10	4.32	3.48	4.03	1.65	2.61
10월 15일	4.10	4.32	3.50	4.03	1.65	2.57
10월 16일	-	4.32	3.42	3.97	1.67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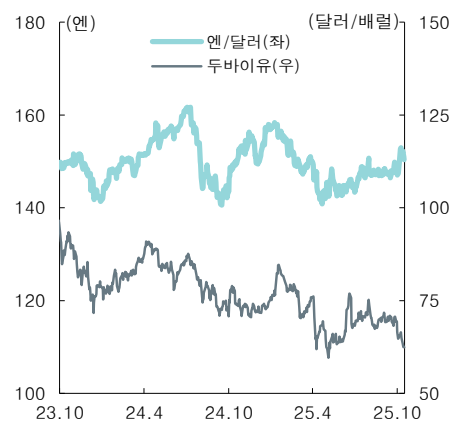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9월말	6,688.5	44,932.6	3,882.8	5,530.0
10월 10일	6,552.5	48,088.8	3,897.0	5,531.3
10월 13일	6,654.7	-	3,889.5	5,568.2
10월 14일	6,644.3	46,847.3	3,865.2	5,552.1
10월 15일	6,671.1	47,672.7	3,912.2	5,605.0
10월 16일	6,629.1	48,277.7	3,916.2	5,652.0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9월말	147.83	1.173	69.3	3,873.2
10월 10일	151.15	1.162	64.9	4,000.4
10월 13일	152.23	1.157	63.4	4,133.0
10월 14일	151.77	1.161	62.5	4,163.4
10월 15일	151.04	1.165	62.5	4,201.6
10월 16일	150.40	1.169	62.5	4,378.6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20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5년 10월 17일 인쇄

2025년 10월 20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20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